

資本蓄積과 雇傭에 대한 價值理論의 分析*

柳 東 民 **

〈 目 次 〉

- I. 問題提起
- II. 巨視的 接近
- III. 微視的 接近
- IV. 結論

I. 問題提起

일반적으로 Marx에 의해 체계화된 勞動價値理論(以下 價值理論)의 주된 목적은 자본주의사회가 자본가계급에 의한 노동자계급의 摾取에 기초한 사회임을 究明하는 데에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價值理論에 대해 加해진 수많은 비판들 중의 상당수는 과연 ‘搾取’라는 규범적 명제가 객관적으로 논증 가능한 것인가를 문제삼았는데, 예컨대 價値는 形而上學的 概念에 불과하다는 Robinson(1966)의 지적도 이러한 측면에서의 것이었다. 한편 이와는 다른 각도에서 자본주의사회의 蓄積動學에 관한 Marx의 분석은 價値概念에 기초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얻어질 수 있다는 의미에서 價值理論의 불필요성을 주장하는 논의(Lippi(1979), 홍훈(1991))도 제기된 바 있다.

그런데 가격의 배후에서 그 변화를 규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價值의 실체

* 이 글의 초고를 읽고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匿名의 심사위원 두 분께 감사드린다. 물론 내용과 관련된 모든 책임은 筆者에게 있다.

**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가 노동이라는 명제는 이론적으로 쉽사리 증명되거나 반박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핵심적인 문제는 價值實體의 존재를 인정하고 특히 그것을 인간의 노동으로 귀착시킴으로써 경제학이 다루고자 하는 과제 자체가 特定한 방향으로 설정된다는 점에 있다.

본 논문은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관점에서 자본축적과 고용에 관한 Marx의 이론을 巨視的接近과 微視的接近의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굳이 兩者를 구분하는 이유는 價值理論의 관점을 받아들이는限, 자본축적과 노동시장 간의 거시적 관련에 대한 분석은 필연적으로 노동과정에 관한 미시적 분석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즉 노동과정분석은 價值理論의 핵심대상인 동시에 Roemer(1981) 등의 이론바 ‘분석적 맥스주의(Analytical Marxism)’에서 제기하는 ‘微視的基礎(micro-foundation)’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특히 價值理論의 有用性을 확인하려는 본 논문의 맥락과 관련하여, ‘擁取’ 개념이 함축하고 있는 規範的 意味와는 독립적으로 價值分析이 자본주의적 노동과정에 관한 유의미한 ‘描寫(description)’로서의 기능을 가질 수 있음을 밝힐 것이다.

II. 巨視的接近

Marx는 『資本論』 제1권 제7편에서 「資本蓄積의 一般法則」이라는 題下에 기술진보가 노동자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은 자본축적과 노동공급의 관계에 대한 巨視分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중요한 주장은 노동시장은 일반적인 상품시장과는 달리 清算이 보장되지 않으며 非自發的失業이 항상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흔히 ‘相對的 過剩人口論’이라 불리우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命題로 요약할 수 있다.

(命題 1) 資本構成이 일정할 때 자본축적의 증대는 노동고용량의 비례적인 증가를 수반한다.

(命題 2) 資本構成이 高度化하는 경우, 노동에 대한 수요는 총자본의 크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한다. 따라서 자본주의적 축적은 상대적으로 과잉인 노동인구를 끊임없이 창출한다.

(命題 3) 근대산업에 적합한 법칙은 자본의 擴張과 收縮의 交替가 노동의 수요와 공급을 규제한다는 것이다.

이제 이들 命題를 간단한 模型을 통하여 검토해 보자.

먼저 임금의 증가율은 노동수요 및 노동공급의 상대적 증가율에 의존하므로, 임금조정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이 정식화할 수 있다.

$$w^*/w = \Phi(l^d - l^s), \Phi(0) = 0, \Phi' > 0 \quad (1)$$

단 l^d 와 l^s 는 각각 노동수요 및 노동공급의 增加率을 나타내며 변수 위의 *는 시간에 따른 變化率을 의미한다.

이 때 賃金率 w 가 實質賃金率을 의미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Marx의 서술로부터 분명하다.²⁾

“노동자들 자신의 剩餘生產物… 중의 보다 많은 부분이 支拂手段의 형태로 노동자들에게 돌아오는데, 그 덕택으로 그들은 자기들의 消費範圍를 확대하고… 자기들의 消費財源을 약간 늘릴 수가 있고, 심지어는 약간의 準備金까지도 형성할 수 있다 (Marx(1989), p. 781 : 強調는 引用者).

노동공급의 증가율은 부분적으로는 인구증가와 같은 外生的 要因(P)에 의해서도 결정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축적율에 의해 조정된다.

$$l^s = k(K^*/K - g) + P = k(ar - g) + P = kar + C \quad (2)$$

(단 k, C 는 常數)

(2)식에서 K , a , r 은 각각 자본스톡, 축적율 및 이윤율을 나타낸다. 또한 이식의 우변에서 첫 번째 항은 축적(K^*/K)이 일정율(g) 이상으로 이루어지면, 예컨대 非資本主義 部門의 資本主義化라든가 年少勞動 및 女性勞動의 증가 등에 의해 노동공급이 창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k > 0$ 이다. C 의 부호는

2) 置鹽은 이에 대해 화폐임금율의 상승은 분명하지만, 실질임금율은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하였다(置鹽(1978), pp. 226ff.). 好況의 絶頂期에서 자본가들은 개인적 소비를 감소시키지 않기 때문에, 소비재 가격은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따라서 소비재 가격으로 측정되는 실질임금은 하락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주장과는 달리 소비재 가격의 상승율이 화폐임금의 상승율보다 높다는 보장은 없다. 결국 이 문제는 蓄積의 구체적인 局面에서만 확인될 수 있는 것인데, 우리의 목표는 Marx의 思考를 再構成하여 評價하는 데에 있기 때문에 실질임금율로 이해한다.

확정적이지 않은데, 가령 工業化의 初期段階라면 陽의 價을 가질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陰의 價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노동에 대한 수요의 증가율은 자본축적의 규모, 자본구성³⁾의 변화, 摾取強度 등에 의해 결정된다. 특히 相對的 過剩人口의 증가는 摾取強度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즉 相對的 過剩人口는 “沈滯期와 평균 정도의 好況期에는 현역 노동자군에 압력”을 가하고, “과잉 생산과 열광적인 확장기에는 現役軍의 요구를 억제”한다(Marx(1989), p. 805). 자본축적과 고용에 관한 Marx의 이론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非自發的 失業의 존재가 노동과정 내에서의 條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여 노동수요의 증가율을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begin{aligned} l^d &= b_1(K^*/K) - b_2(q^*/q) + \gamma(l^d - l^s) \\ &= b_1ar - b_2(q^*/q) + \gamma(l^d - l^s) \\ (b_1 > 0, b_2 > 0, \gamma > 0 \text{인 常數}) \end{aligned} \quad (3)$$

여기에서 γ 는 摾取強度를 나타낸다. 가령 노동시장에서 공급증가율이 수요증가율을 상회하는 경우($l^d - l^s < 0$)라면 摾取가 強化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γ 의 값이 커지며, γ 가 클수록 노동수요의 증가율은 작아질 것이다. (3)식에서는 단순화를 위해 γ 를 常數로 나타내었지만 그 자체가 $l^d - l^s$ 의 減少函數라고 할 수 있다.

(2)식과 (3)식으로부터 다음을 얻는다.

$$l^d - l^s = [b_1ar - b_2(q^*/q) + \gamma(l^d - l^s)] - (kar + C) \quad (4)$$

따라서

$$(1-\gamma)(l^d - l^s) = (b_1 - k)ar - b_2(q^*/q) - C \quad (5)$$

3) 資本構成(composition of capital)은 生產過程에 投入되는 生產手段과 勞動力간의 비율을 표시하는 개념인데, 그것을 가치팀으로 계산하는 경우 價值構成이라 부르고 물량팀으로 계산하는 경우 技術的 構成이라 부른다. (3)식의 資本構成은 技術的 構成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兩者간의 개념적 구분에 관해서는 Fine & Harris(1985)를 참조하라. 本文의 脊絡에서 주목할 것은 技術的 構成과 價值構成의 变動방향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5)식을 (1)식에 代入하면 다음을 얻는다.

$$w^*/w = \Phi[1/(1-\gamma)[(b_i-k)ar - b_2(q^*/q) - C]] \quad (6)$$

그런데 資本主義가 발전할수록 제도적·사회적 요인(예컨대 勞動立法, 前資本主義 地域의 縮小)에 의해 k 의 값은 작아진다고 볼 수 있다. 즉 $b_i-k > 0$ 일 가능성이 커진다. 또한 『資本論』 제1권의 서술에 따르면, 相對的 過剩人口의 增加率은 資本構成의 증가속도보다 빠르다는 것이 Marx의 생각이었다(Marx (1989), p. 801). 즉 (5)식으로부터 $\Delta(l^d-l^s)/\Delta(q^*/q) = -b_2/(1-\gamma) < -1$ 이다.

이제 (命題 1)을 검토해 보자. 資本構成이 일정하다면($q^*/q = 0$), (6)식은 다음과 같이 변형된다.

$$w^*/w = \Phi[1/(1-\gamma)[(b_i-k)ar - C]] \quad (7)$$

Marx의 논의는 축적율(a)이 증가하면 실질임금(w)이 상승하고, a 가 감소하면 w 가 하락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階級間 力關係를 반영하는 係數(γ)를 명시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이 결과는 수정되어야 한다.⁴⁾ 즉 $\Delta a > 0$ 이라 하더라도 $\gamma > 1$ 이라면 $\Delta(w^*/w) < 0$ 일 수 있다. 이는 축적의 증대가 勞動時間의 延長 및 勞動強度의 強化 등과 같은 이른바 絶對的 剩餘價値의 생산을 수반하는 경우이다. 그러므로 (命題 1)은 $0 < \gamma < 1$ 이라는 가정 하에서만 타당하다.

다음으로 (命題 2)에 관해 생각해 보자. 축적율과 자본구성은 동시에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5)식으로부터 축적율이 증가할 때 노동수요 변화율의 증가분은 $[(b_i-k)r/(1-\gamma)]\Delta a$ 이고, 자본구성이 상승할 때 노동수요의 변화율의 감소분은 $[b_2/(1-\gamma)]\Delta(q^*/q)$ 이다.

이제 (6)식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는다.

$$\begin{aligned} \Delta(w^*/w) &= [(b_i-k)/(1-\gamma)]r\Phi'\Delta a - [b_2/(1-\gamma)]\Phi'\Delta(q^*/q) \\ &= [\Phi'/(1-\gamma)] \times \{(b_i-k)r\Delta a - b_2\Delta(q^*/q)\} \end{aligned} \quad (8)$$

4) 뒤의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階級間 力關係는 剩餘價値率을 결정하며, 이는 利潤率을 통해 蓄積率에 영향을 미친다. 즉 蓄積率 자체가 階級間 力關係의 영향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γ 가 資本構成 및 相對的 過剩人口의 크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이는 것이 목적이므로 이 문제를 무시한다.

먼저 확인해 둘 것은 資本構成의 高度化가 相對的 過剩人口를 항상 창출한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 資本規模가 일정한 상태에서는 資本構성이 상승하면 고용된 노동력의 일정부분은 逐出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자본축적으로 말미암아 資本의 絶對的인 規模 자체가 계속 커지기 때문에 逐出된(또는 逐出될) 勞動力의 일정 부분은 생산과정으로 흡수된다. 그런데 이러한 두 가지 경향 모두 資本의 價值增殖過程이라는 동일한 현실 내부에서 도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혼히 주장하듯이 前者는 본질적인 '傾向'이고 後者는 부차적인 '反傾向'이라 간주함으로써 문제를 벗어날 수는 없다.

Marx 자신도 佛語版『資本論』에서 노동에 대한 絶對的 / 相對的 需要를 구분하고 絶對的 需要의 방향은 불확정적임을 인정하였다.⁵⁾ 즉 可變資本의 增加率과 總資本의 增加率 간의 관계가 취할 수 있는 세 가지 조합에 따라 絶對的 需要是 增加 · 減少 · 不變일 수 있다는 것이다(Marx(1976), p. 277l). 즉 (5)식으로부터 絶對的 需要의 增加分은 $[(b_1 - k)r / (1 - \gamma)]\Delta a - [b_2 / (1 - \gamma)]\Delta (q^*/q)$ 로 나타낼 수 있는데, $b_2 / (1 - \gamma) > 1$ 이라는 Marx의 가정을 받아들이더라도 이것의 부호는 사전적으로는 확정되지 않는다. $b_2 / (1 - \gamma) > 1$ 은 현실타당성이 상당히 의문시되는 가정이지만, 어차피 그 자체만으로는 노동수요의 절대적인 감소가 보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b_2 / (1 - \gamma) > 1$ 자체가 결정적인 가정은 아닌 것이다. 그런데 (命題 1)과 관련하여 지적한 論點은 여기에서도 확인된다. 즉 축적율이 충분히 증가하더라도 $\gamma > 1$ 이라면 노동수요(따라서 임금율)는 절대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

결국 以上의 간단한 模型으로부터 (命題 1)과 (命題 2)의 妥當性 與否는 係數 γ 의 크기에 의존함을 알 수 있다. 자본축적이 일반적으로 技術的 構成을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는 Marx의 前提를 승인하더라도, 그와 같은 技

5) 이러한 구분은 『資本論』現行版에서는 明示的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목할 만 한다.

"자본이 야기하는 노동의 절대적 수요는 자본의 절대적 크기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변부분…의 크기에 비례한다. 자본이 야기하는 노동의 상대적 수요는… 그 가변부분의 비례적 크기에 의해 규정된다"(Marx(1976), p. 276 ll : 強調는 原文).

특히 『資本論』제1권 제7편과 관련하여 Marx가 직접 교열한 佛語版의 文獻的 意義에 관해서는 林直道(1976)를 참조하라. 어쨌든 이러한 文獻的 根據에 기초할 때, 過剩人口의 增減을一律的으로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들어 相對的 過剩人口論을 비판하는 것은 焦點이 빛나간 것이라 할 수 있다.

術變化가 價值構成을 상승시킨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다. 價值構成의 变化방향은 係數 γ 의 영향까지 고려할 때 비로소 확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0 < \gamma < 1$ 이라는 가정은 階級間 力關係가 일정한 범위 내에 뮤여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자본축적이 진행됨에 따라 剩餘價值率의 時間的・空間的 不均等性은 심화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本節에서와 같은 1部門 模型에 기초하여 경제 전반에 걸친 相對的 過剩人口의 累進的 再生產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 즉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勞動力 價值의 形成과정'에 관한 분석인데, 이는 다음 節에서 검토할 미시적 측면의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Marx는 암묵적으로 『資本論』 제1권의 분석수준에서는 생산의 技術的 및 社會的 條件의 部門間 隔差는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상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자본축적의 動學을 구체적으로 해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석되어야 하며, 價值理論의 현실적인 과제도 실상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γ 가 함축하고 있는 階級對立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노동시장에서의 임금결정 및 생산물시장에서의 가격결정이라는 流通領域의 문제이다. 相對的 過剩人口의 존재는 노동자 측의 交涉力を 약화시킴으로써 임금결정에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 반대로 강력한 勞動組合이 존재하는 경우, 기업이 獨占力を 발휘하여 제품가격을 인상시키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임금상승을 요구할 수 있다. 이것은 Kalecki(1971)에 의해 定式化된 바 있는 고전적인 價格引上-賃金上昇의 螺旋形 運動(wage-price spiral)으로 분석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기술혁신의 효과를 결정하는 生產領域의 문제인데, Marx의 이론에서 본질적인 측면은 바로 이것이다. 기술변화의 효과를 물가상승율과 화폐임금상승율 간의 관계만으로 파악하는 것은 불충분하다. 예컨대 實質賃金率이 하락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생산과정을 통해 임금교섭 당시에 예상하였던 수준의 勞動強度 및 勞動生產性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자본가는豫想利潤을 얻을 수 없게 된다. 價值理論의 논리구조 속에서 이와 같은 상황을 분석하기 위한 매개개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勞動力의 價值'라는 개념이다.

한편 Malthus의 인구법칙 批判과 관련하여 인구증가율의 외생적인 증가가 갖는 의미를 검토해 보자. (6)식에서 이는 外生變數 C 의 독립적인 증가로 나타

나는데, 이 때 다른 요인들에 변화가 없다면 實質賃金率이 하락한다. 인구의 독립적인 변화는 분명히 相對的 過剩人口의 규모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命題 3)은 인구증가율이 安定的인 趨勢를 유지할 때 자본축적의 內生的인 과정이 過剩人口의 증가를 가져 오는 메커니즘을 지적한 데에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즉 노동의 초과공급의 궁극적인 원인이 인구증가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Hollander(1984), p. 145)에서 (命題 3)은 弱한 형태로만 관찰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相對的 過剩人口가 현실화되는 것은 축적의 어떤 局面에서일까? Marx는 노동수요의 절대적 감소가 일어날 수 있는 두 가지 實例를 들고 있는데, 하나는 대규모 산업부문에서 자본축적이 생산물 가격의 저렴화를 동반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노동수요의 증대 및 생산물의 과잉에 의해 자본이 暴力的 方式으로 노동을 排除하는 경우이다(Marx(1976), p. 278I).

특히 첫 번째 경우와 관련하여 Marx는 기술혁신과 생산규모, 상품가격 간에 일정한 관련을 상정하였다. 즉 資本構成을 高度化하는 새로운 기술은 일반적으로 대규모의 자본투하를 필요로 하며 그 결과 상품의 가격은 하락한다는 것이다.⁶⁾ 상품의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勞動生產性의 진보에 따라 상품의 價值가 하락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기술혁신과 생산규모의 관련을 명시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古典學派(또는 Sraffa)의 生產價格體系는 산출량의構成 및 規模와는 독립적이라는 특징을 갖기 때문에, 企業間 規模 · 生產性 隔差가 가격 및 총분배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된다(Levine(1980)). 그러므로 Marx가 현실적으로 생산규모라는 요인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은 古典學派 體系와의 차이점을 암시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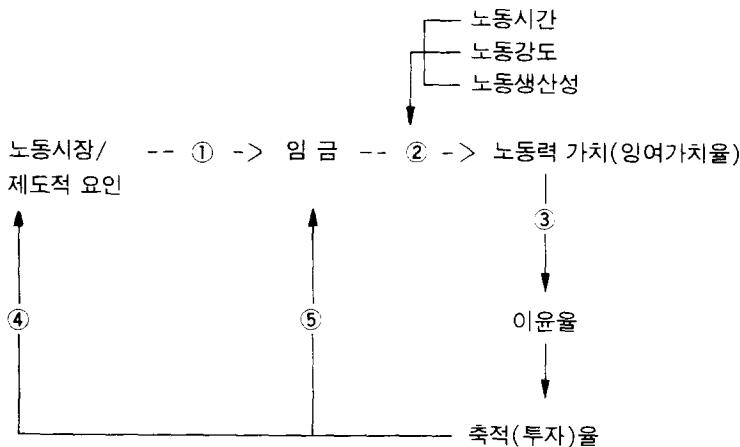
두 번째 경우를 생각해 보자. 노동수요가 증대하고 생산물이 공급과잉인 상황에서는 임금은 상승하고 상품가격은 하락할 것이다. 따라서 실질임금은 당연히 상승할 것이다. 이것은 다른 條件이 일정하다면 그에 상응하는 잉여가치율의 하락으로 나타나며, 價值增殖條件의 압박에 직면한 자본은 기술진보를 도모할 것이다. 이 때 과잉인구의 창출을 통해 임금율을 실제로 하락시킬 수

6) 이에 관한 문헌상의 근거로는『資本論』제1권의 다음과 같은 서술을 참조하라.

“상품값이 싸지는 것은, 기타 조건이 같다면, 노동생산성에 의존하며, 노동생산성은 생산규모에 의존한다”(Marx(1989), p. 790 : 強調는 引用者).

있는 것은 자본이 생산조건의 노동절약적인 변화에 성공하는 경우뿐이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가 성공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생산과정 내에서 勞動者階級의 조직적인 저항을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에 의존한다. 이에 성공한다면 자본가는 생산수단의 소유자로서 갖는 法律的・形式的 權力 뿐만 아니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노동공급까지 조절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實質的인 從屬을 위한 權力까지 획득하는 것이다. 노동력의 再生產過程에 관한 자본의 통제는 현대자본주의 하에서는 국가의 역할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原論적으로는 기술혁신과 과잉인구 창출메커니즘에 의해 주어진다. 그러므로 Marx의 이론에서 열쇠를 이루는 변수는 資本構成과 階級間 力關係라 할 수 있으며, 巨視的인 관점에서 價值分析의 대상은 이들 변수의 동태를 파악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

〈그림 1〉



이상의 논의를 기초로 하여 價值理論에서 파악하는 자본축적과 소득분배의 상호관련을 〈그림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1〉에 등장하는 여러 요인들은 현실적으로는 상호영향을 주고 받는 하나의 圓環을 이룬다. 그러나 논리적으로는 잉여가치율의 결정이 이윤율 결정에 先行하는 과정이다. 축적율이 임금율을 결정한다는 Marx의 주장은 ⑤와 같은 직접적인 經路를 상정하는 것은 아니며 ④→①의 經路를 이론화한 것인데, 자본주의의 長期的 發展에 따라 이것이 함축하는 내용도 필연적으로 변화한다. 즉 자본주의 初期에는 相對的

過剩人口가 노동시장을 규제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이지만, 이른바 Ford주의적 축적체제 하에서는 제도화된 단체교섭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 현대자본주의 하에서의 ④ 및 ①의 변모과정과 그것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제도·역사적 연구(Boyer(1992))는 그 자체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價值理論에서는 ②의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노동생산성이 단순히 技術的 要因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이 핵심적이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相對的 過剩人口論은 노동력의 재생산 및 공급을 통제하기 위한 자본의 기술혁신 노력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勞動者階級의 저항, 자본의 部門間 移動 및 상품가격의 변동 등을 資本構成과 階級間 力關係라는 변수들을 중심으로 해명하고자 하는 이론이다. 그러므로 相對的 過剩人口論은 자본주의의 長期的 傾向⁷⁾이라기보다는 경기변동의 각 국면 및 부문에서 관찰되는 기술 혁신과 실질임금을 결정 간의 관계에 대한 短期的 分析이라 할 수 있다. (命題 1)-(命題 3)은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따라서 각 부문 내부의 노동과정에 관한 微視的 接近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III. 微視的 接近

(1)-(6)의 賃金決定式으로 표현되는 노동시장에 관한 模型의 특징 중의 하나는 개별 경제주체의 行態(behaviour)를 묘사하는 방정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이 模型이 자본축적과 노동시장 간의 巨視的 關聯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價值分析의 本質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즉 자본주의 사회의 모든 主體들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스스로의 행동을 결정하며, 價值 概念 그 자체는 관측불가능하기 때문에 미시적인 행동원리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價值理論의 과제는 나름대로 자율성을 갖고 전개되는 價格體系의 動態를 價值體系의 변화에 입각하여 설명하는 데에 있다. 구체적으로 이것은 자본축적의 진전에 따른 노동생산성의 발전과 실질임금율 및 이윤율의 전개를 가치생산과정의

7) 예컨대 Morishima(1973)는 相對的 過剩人口論을 자본주의의 崩壞理論과 연결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崩壞理論과의 연결은 且置하더라도 과잉인구의 창출을 장기적인 경향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階級力關係에 관한 일정한 假定이 필요하다.

결과로서 해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價值生產過程은 동시에 勞動力 價值의 形성과정이며 따라서 剩餘價值率이 결정되는 과정이기도 하다.⁸⁾ 剩餘價值率의 변동은 실질임금의 변화율과 勞動生產性의 변화율을 비교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예컨대 어느 부문에서 실질임금이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승율이 노동생산성의 증가율에 미치지 못한다면, 해당 부문의 剩餘價值率은 상승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剩餘價值率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노동과정 내에서 결정되는 労動時間 · 労動強度 · 労動生產性으로 集約될 수 있으며(그림 1), 이는 이미 Marx가 『資本論』제1권 제5편 제17장 「勞動力의 價格과 剩餘價值의 量的 變動」에서 분석한 바 있다. 이제 이 관계를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해 보자.

$$Q = f\{[1+e(w, h, i)]N\} \quad f' > 0, e_1 < 0, e_2 > 0, e_3 > 0. \quad (9)$$

여기에서 Q , e , w , h , i , N 은 각각 價值生產量, 剩餘價值率, 實質賃金率, 勞動時間, 労動強度, 雇傭量을 나타낸다. 이 때 주목할 것은 e 의 결정요인들간의 상호작용이다. 즉 實質賃金(w)의 하락은 그 자체로서는 剩餘價值率(e)의 증가를 가져오지만, 만약 그것이 労動時間(h) 또는 労動強度(i)의 감소를 수반하는 경우라면 오히려 e 가 감소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剩餘價值率이라는 변수 자체는 행동결정기준으로 기능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勞動時間 및 労動強度는 노동자의 주관적인 效用水準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노동자의 효용이 단순히 所得-餘暇의 선택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노동과정 내에서의 여러 조건들의 函數이기도 하다는 점을 承認함으로써 價值理論에 대해 미시적 기초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이 때 가치생산과정의 미시적 기초는 노동과정을 노동자와 자본가가 각각 스스로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과정으로 분석함으로써 제시될 수 있다. 물론 효용 개념을 전제하고 개인의 합리적 선택

8) 價值理論 내부에서는 Marx 또는 古典學派의 전통에 따라 勞動力의 價值를 노동자가 소비하는 賃金財의 價值로 치환함으로써 그 크기는 生產過程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많은 弱點을 가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勞動力 商品과 다른 基礎財 간의 차별성이 稀釋됨으로써 價值理論의 문제를 오히려 부정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예컨대 땅콩은 왜 가치실체일 수 없는가라는 냉소적인 질문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따라서 勞動力 價值는 價值生產過程과 동시에 결정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보다詳細한 논의로는拙稿(1994), pp. 54-64를 참조하라.

을 부각시키는 것은, 일반적으로 양립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Marx의 이론과 方法論的 個人主義라는 두 가지 문제들을 혼합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反論이 예상된다. 그러나 각 개별 주체의 동기(motive)를 논리정합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면 어떤 사회과학 이론도 성립불가능하며, 價值理論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이제 노동자의 효용함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U = U(w, h, i) \quad U_1 > 0, U_2 < 0, U_3 < 0 \quad (10)$$

그런데 價值理論의 관점에 따르면 노동자의 效用極大化는 두 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먼저 고용계약이 체결되는 시점에서 노동자는 일정 수준의 h, i 를 예상하면서 임금교섭에 臨한다. 다음으로 w 가 결정된 이후의 노동과정에서 자신이 선택한 h, i 를 관찰시킴으로써 效用極大化를 도모한다. 이와 같이 노동력의 매매와 그 현실적인 지출(즉 노동과정)을 구분하고 兩者的 차이로부터 摘取를 설명하는 것이 價值理論의 핵심적 논리인 것이다.

이제 이 두 번째 단계의 문제를 理論화해 보자. 실질임금율이 일정한 상태에서 동일한 수준의 效用을 가져다 주는 勞動時間과 勞動強度의 조합의 軌跡으로 정의되는 無差別曲線을 그릴 수 있다. 노동시간과 노동강도는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모두 非財貨(Bads)이므로 이 無差別曲線은 원점으로 가까워질수록 높은 수준의 효용을 나타낼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長時間勞動을 할수록 노동강도강화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이 세질 것이므로 노동시간과 노동강도 간의 限界代替率은 遲增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즉 無差別曲線은 원점에 대해 오목한 모양을 갖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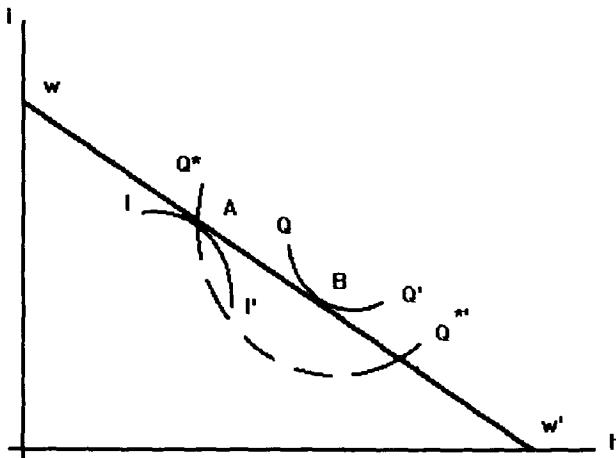
한편 자본가의 입장에서는 동일한 수준의 價值生產量을 보장해주는 等價值量曲線을 그릴 수 있다. 價值는 개별 자본가로서는 관측불가능한 것이기는 하지만, 價值量이 생산량에 비례할 것이라 가정하면 일반적인 等量曲線과 동일한 모양을 갖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어진 임금으로 선택가능한 노동시간과 노동강도의 조합을 표현해 주는 等賃金線을 미시경제학에서의 等費用線과 동일한 모양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제 勞動過程 내에서 노동자의 效用極大化는 等賃金線과 無差別曲線이 接하는 점에서 이루어지며, 자본가의 균형은 等賃金線과 等價值量曲線이 接하는

점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즉 <그림 2>에서 가로축에 노동시간, 세로축에 노동강도를 표시하면 $I \cdot I'$ 와 QQ' 는 각각 노동자의 無差別曲線과 等價值量曲線이며 ww' 는 等賃金線이다. 따라서 노동자의 균형은 A점에서 이루어지며 자본가의 균형은 B점에서 이루어지는데, 兩者가 같은 점이라는 보장은 전혀 없다. 현실적으로는 선분 AB상의 어느 한 점에서 노동시간과 노동강도가 결정될 것이다. 労動力 價值와 剩餘價值率은 개별 경제주체가 識別할 수 없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그 크기는 바로 이 과정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만약 균형이 A점에서 이루어진다면 노동자의 效用은 極大化되지만 價值生產量은 $Q^*Q^{*\prime}$ 가 나타내는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다. 즉 B점에서보다 剩餘價值率이 하락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ww' 가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AB 사이의 어느 점에서 현실적인 균형이 성립하는가는 노동시장의 清算與否와는 무관함을 알 수 있다.

<그림 2>



그런데 이러한 접근방식은 노동생산성이 기업이 지불하는 실질임금의 크기에 의존한다는 이른바 '效率性賃金假說(efficiency wage model)'의 주장과 매우 유사하다. 가령 생산량을 Q , 생산함수를 F , 노동자 1인당 努力(effort)을 E 라 표시할 때, 效率性賃金假說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그 논리구조는 (9)와 大同小異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Q = F[E(w)N] \quad F'>0, E'>0. \quad (11)$$

Yellen(1984)은 效率性賃金假說이 설명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특징적인 현

상을 네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以下에서는 價值理論에 입각하여 이를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을 보임으로써 우회적인 방식으로 微視的側面의 문제를 확인하고자 한다.⁹⁾

첫 번째로 실질임금의 硬直性이라는 현상이다. (9)식으로부터 금방 알 수 있듯이 實質賃金이 不變이라 하더라도 노동생산성이 변화한다면 剩餘價值率도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노동의 한계생산성이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임금은 일정하게 유지되는 일견 逆說的인 상황은 價值理論에 의하면 쉽게 설명된다.

두 번째는 二重勞動市場(dual labor market)假說에 대한 설명이다.

效率性賃金假說에서는 임금과 생산성의 連繫가 強한 부문(즉 1차 부문)에서는 기업이 균형수준 이상의 임금을 자발적으로 지불하는 현상이 발견되므로 非自發的失業이 존재하게 되며, 職務割當(job-allocation) 등의 현상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임금-생산성의 連繫가 弱한 부문(즉 2차 부문)에서는 新古典派의 의미에서의 시장청산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價值理論에 따르면 1차 부문은 임금상승이 생산성증가로 즉각 반영되는 부문임을 의미하므로 해당 부문의 剩餘價值率은 일정하게 유지된다. 한편 2차 부문은 생산성상승에 상응하는 임금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剩餘價值率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거나, 반대로 임금상승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은 증가하지 않는 상황이다. 즉 어떤 부문이 1차 부문인가 2차 부문인가는 해당 부문에서의 階級條件에 의존한다. 따라서 剩餘價值率 자체가 時間的·空間的으로 不均等하게 전개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1차 부문과 2차 부문은 동시에 並存할 수도 있으며 通時的으로 交替되어 나타날 수도 있다.¹⁰⁾

세 번째는 同一特性을 갖는 노동자들 간에 임금격차가 나타나는 현상이다.

效率性賃金假說에서는 이를 기업별로 賃金과 努力單位(efficiency unit)간의 관계가 상이한 상황이라 해석한다. 그러나 價值理論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은 각 기업간에 剩餘價值率이 균등화되는 균형상태일 수 있다. 가령 어느 기업

9) 이미 Bowles(1985)는 Marx의 微視經濟學의 특징은 市場에서의 自發的 관계와 作業場에서의 지배관계 간의相互作用에 焦點을 맞추는데에 있다고 주장하고, 이를바 '勞動抽出函數(labor extraction function)'를 이용하여 本論文와 유사한 시도를 한 바 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模型에서 價值理論은 아무런 分析的役割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10) 예컨대 '調節學派(Regulation School)'에서 말하는 Ford주의적 蕩積體制와 脫Ford주의적 蕩積體制 간의 구분은 이에 該當한다. 즉 Ford주의적 죽직체제의 성공조건은 잉여가치율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데에 있으며, 그 위기는 생산성 둔화로 인한 잉여가치율 하락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에 고용된 노동자가 다른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보다 더 높은 실질임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노동시간이 더 길거나 강화된 노동을 하고 있다면 잉여 가치율에는 별 차이가 없을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이한 人的 屬性(예컨대 性이나 人種)을 갖는 노동자그룹간의 賃金差別이라는 문제이다. 效率性 賃金假說에 따르면 고용주가 각 특성별 노동자의 賃金-努力간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노력단위당 비용이 많이 드는 그룹에 대해서는 차별을 행할 것이라 해석한다. 또는 職務割當의 방법을 통해 추가적인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자신의 嗜好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현상 역시 價值理論에 의해서도 설명될 수 있다. 즉 숙련 등의 경제적 조건에서는 완벽하게 동일한 노동자라 하더라도 사회적·문화적 편견 등을 이용하여 剩餘價值率隔差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以上의 설명에서 주목할 것은 이윤의 원천이 노동자계급으로부터의 '擰取'인 가의 與否에 관해서는 어떠한 가치판단도 전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다만 실질임금의 변화율과 노동생산성의 변화율을 비교함으로써 剩餘價值率의 推移가 어떻게 전개되는가라는 측면만이 이용되었을 뿐이다. 즉 非自發的 失業의 존재라는 현상을 微視的으로 分析함에 있어서 剩餘價值가 擰取된 것인가 아닌가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效率性 賃金假說 자체에 대해 微視的 基礎를 부여하려는 대표적인 시도인 Shapiro & Stiglitz(1984)의 '怠慢(shirking)'模型을 검토함으로써 쉽게 확인된다.

이들의 기본적인 전제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작업성과에 대해 '裁量(discretion)'을 갖고 있으며, 고용주가 노동자들의怠慢與否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兩者間에 '情報의 非對稱性'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업으로서는 노동시장을 균형시키는 수준보다 높은 임금을 지불함으로써 근로의욕을 제공하고자 한다. 만약 기업이 균형수준의 임금만 지불하고자 한다면 노동자들은怠慢하려는誘因을 갖게 된다. 노동자들로서도 자신이 해고당할 경우에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을 고려할 때 균형수준 이상의 임금을 받으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된다.

그런데 價值理論은 Shapiro & Stiglitz(1984)와는 정반대의 가정에서부터 출발한다. 즉 노동과정의 지휘·조직·통제 및 생산물의 처분에 관한 결정은 기본적으로 자본가계급이 장악하고 있으며 노동자계급은 이러한 결정으로부

터 체계적으로 배제당한다고 본다.¹¹⁾ ‘榨取’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장소도 바로 여기이다. 따라서 자본가계급이 균형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불하는 것은 노동자계급이 결정권으로부터 배제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잉여가치율의 감소를 임금인상을 통해 회복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즉 임금인상 그 자체는 분명히 잉여가치율을 감소시키지만, 자본가로 하여금 노동과정 내에서의 통제를 원활하게 해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잉여가치생산의 기반을 확고하게 만드는 것일 수 있다. 특히 價值理論에서 말하는 均衡은 (9)식에서 e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변수(w , h , i)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임에 주의하면, 그것이 달성되는 것과 노동시장이 清算되는 것은 독립적인 사실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덧붙여 價值理論의 문제들로부터 출발하는 것은 경제학의 연구과제 자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즉 ‘怠慢’ 模型에서는 일하기 싫어하는 인간의 본성이 독립변수가 되고 노동과정의 조직형태는 從屬變數로 간주되고 있음에 반해, 價值理論에서는 노동과정의 制度的 歷史的 形態에 관한 분석이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IV. 結 論

以上에서 價值理論의 분석대상 그 자체는 예컨대 效率性賃金假說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榨取’라는 規範的 結論이 도출되는 것은 자본주의적 노동과정에 대한 관점의 차이 때문임을 확인하였다. 즉 노동자와 자본가가 노동력이라는 생산요소의 수요자와 공급자로서 대등하게 맞서는 新古典學派의인 세계에서와는 달리 현실적으로는 어느 한쪽이 우월한 情報를 갖는데, 그것이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따라 다른 결론이 도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榨取’라는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價值理論에 의거하여 노동과정 내부의 문제와 자본축적, 고용 등의 관련을 분석할 수 있다. 예컨대 ‘勞動力 價值’ 概念은 임금율만으로는 알 수 없는 정보, 즉 노동강도와 노동생산성 등의 정보를 함축하고 있다. 또한 ‘剩餘價值率’ 概念은 그 규범적 의미를 삭제

11) Braverman(1987)의 이론바 ‘脫熟練化 命題’로부터 알 수 있듯이 Marx 경제학의 정통적인 흐름은 분명히 자본주의 발전과 더불어 이러한 경향이 徹底化되는 것으로 믿었다. 즉 Shapiro & Stiglitz와는 정반대되는 의미에서의 ‘情報의 非對稱性’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자본축적의 진행에 따라 그 정도가 深化된다는 것이다.

하더라도 賃金-努力간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나타낸다. 마찬가지로 ‘資本의 價值構成’概念은 자본가의 기술변화 의도가 노동자들의 努力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반영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그러나 摧取理論을 배제하더라도 중요한 차이는 여전히 남는데, 價值理論은 노동과정의 組織形態에 관한 制度歷史的 研究를 경제학의 중요한 분석대상으로서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노동과정분석은 價值理論의 미시적 기초를 형성하는 동시에, 그 사회적·역사적 조직형태의 형성을 경제주체들의 상호작용에 의한 內生的 過程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Marx의 체계, 또는 價值理論의 체계에서 비자발적 실업의 존재 근거는 기술혁신 노력과 노동과정 내에서의 대립관계의 동학으로부터 찾아진다. 이때 前者는 축적과정의 필연적 귀결로서 발생하며 자본구성의 변화로 표현된다. 반면 後者は 기술변화의 사회적 파급효과의 범위와 정도를 결정한다. 이러한 관점은 Keynes적인 의미에서의 비자발적 실업의 미시적 기초를 설명하려는 효율성임금가설과는 상이한 각도에서 현실을 照明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변화의 內生性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參 考 文 獻

- 柳東民, “價值理論의 整合性과 分析的 意義에 관한 研究,” 서울大學校 經濟學博士 學位論文
- 林直道, 『フランス語版資本論の研究』, 大月書店, 1976
- 置鹽信雄, 『資本制經濟の基礎理論』, 創文社, 1978
- 홍훈, “맑스 경제이론의 두 가지 축: 노동가치설과 내적 논리,” 『현상과 인식』, 제15권 제3호, 1991, pp. 9-49
- Bowles,S., “The Production Process in a Competitive Economy: Walrasian, Neo-Hobbesian, and Marxian Model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75, no. 1, 1985, pp. 16-36
- Boyer,R., “Labour Institutions and Economic Growth: A Survey and a “Regulationist” Approach,” *CEPREMAP Working Paper*, no. 9218, 1992
- Braverman,H., 이한주 강남훈 共譯, 『노동과 독점자본』, 까치, 1987

8. Fine,B. and L. Harris, 金秀行 譯, 『현대정치경제학입문』, 한울, 1985
9. Hollander,S., "Marx and Malthusianism : Marx's Secular Path of Wage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74, no. 1, 1984, pp. 139-59
10. Kalecki,M., *Selected Essays on the Dynamics of the Capitalist Economy* : 1933-1970,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1
11. Levine, David P., "Aspects of the Classical Theory of Markets," *Australian Economic Papers*, June 1980, pp. 1-15
12. Lippi,M., *Value and Naturalism in Marx*, New Left books, 1979
13. Marx,K., 林直道 編譯, 『マルクス資本論第一巻フランス語版』, 大月書店, 1976
14. Marx,K., 金秀行 譯, 『資本論 I』, 比峰出版社, 1989
15. Morishima, M., *Marx's Econom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3
16. Robinson,J., *An Essay on Marxian Economics*, Macmillan Press, 1966
17. Roemer,J. E., *Analytical Foundations of Marxian Economic The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18. Shapiro,C. and Joseph E. Stiglitz, "Equilibrium Unemployment as a Worker Discipline Devic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74, no. 3, 1984, pp. 433-44
19. Yellen, Janet L., "Efficiency Wage Models of Unemploy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74, no. 2, 1984, pp. 200-5